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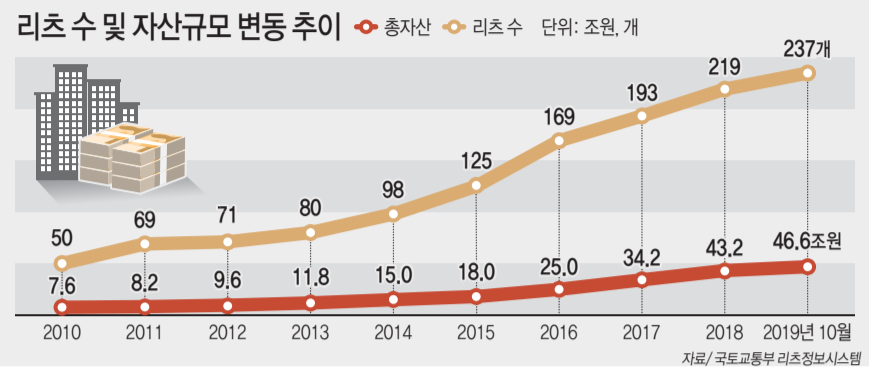


[금융] BNK금융 김지완 회장 연임 유력 05



Economy

코스피	2084.07 (-7.85)	코스닥	629.58 (-4.92)
금리 (국고채 3년)	1.46 (+0.04)	환율 (원/달러)	1187.20 (+4.10) (3일)



롯데發 리츠 광풍 ‘고평가 논란’ 고개

롯데·NH프라임리츠 흥행 속 리츠자산 5년 만에 3배 이상 ↑ 증권가 내년 증시 훈풍 예상에 일반 주식처럼 ‘신중 접근’ 조언

저금리 시대 지속으로 쏠림현상이 뚜렷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리츠(REITs)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롯데리츠 ‘광풍’이 리츠시장을 고평가 영역으로 끌어 올려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리츠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리츠 시장의 쌍두마차로 대표되는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의 상승세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롯데리츠의 3일 종가는 6220원으로 5000원이던 공모가보다 24% 이상 상승했다.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63.28대 1을 기록하며 4조761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던 상장 당시 흥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는 5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NH프

라임리츠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317.6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인 7조7499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기록했다.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랩 역시 3일 종가 기준 각각 7870원, 6830을 나타냈다. 5000원이던 공모가보다 크게 올랐다.

15조원으로 평가됐던 2014년 전체 리츠 자산은 5년 만에 지난달 기준 46조원으로 3배 이상 불었다.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연 4~6%) 한다는 것이 매력이다. 소액으로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초기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학계에선 리츠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식이나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라며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내년 증시에 훈풍이 불 것을 예상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5%룰 시행령 개정은 지나친 경영간섭”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5개 경제단체 정책세미나 개최

제단체가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

량보유상황 보고제도(5%룰)를 완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할 경우 이를 5일 안에 상사하게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시배당 등 ‘경영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정 항목을 경영개입이 아닌 것으로 제외해 지분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공시 의무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공적연기금은 5일에서 1개월로 각각 늘어나며 보고 의무 항목도 간소화된다.

최 교수는 “5%룰 완화로 기업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어떤 경영권 개입 움직임을 보이는 지 한 달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면서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룰은 완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5%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1일 내 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5%룰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도 3% 보고제도, 5일이 아닌 2거래일 내 보고제도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최 교수는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연기금 운용 위원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면서 “반면 국민연금에는 기재부 차관, 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이 너무 많아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최대 9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사외이사 오랫동안 회사와 관계를 맺으면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은 한국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12월의 눈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GS그룹 세대교체... 새 회장에 허태수

GS그룹이 임원 45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세대 교체’를 알렸다.

GS그룹은 3일 허창수 GS 회장이 사장단회의에서 지난 15년간 그룹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공식적으로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허태수 GS홀딩스 부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창수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오너가 ‘4세’가 전진 배치됐다.

이날 GS는 ▲부회장 승진 2명 ▲대표이사 신규선임 1명 ▲사장 승진 5명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10명 ▲전무 외부영입 2명 ▲상무 신규선임 21명 ▲전배 2명 등 총 45명에 대한 2020년도 임원인사를 내정했다.

(관련기사 4면)

GS는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과 경영능력이 검증된 리더들을 사장으로 과감히 전진 배치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구조를 갖추기 위해 글로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과감히 영입하여 중용한 것이 이번 임원인사의 주요 특징이다.

GS는 이번 인사 후 사장단 평균연령이 57세로, 전년보다 3세가량 낮아지게 된다며 세대교체로 조직에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5명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을 진행하며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文 “국회,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계절관리제 안착 위한 뒷받침 필요 매연저감비용 지원 등 부담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황사가 10월 및 11월을 기점으로 자주 찾아오는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반도의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은 11월 및 12월 미세먼지는 지난 200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